

# 한국 발명환경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완)



박성웅  
〈동양라이트 대표〉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저자의 승락을 받아 연재하는 것임. <편집자 주>

## 목 차

- I. 서론
- II.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발명
- III. 한국의 발명현황과 특허제도
- IV. 한국발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V. 결 론

〈고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 V. 결론

### 1. 한국발명 현황의 분석결과

지금까지 한국의 발명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한국의 발명특허 출원은 대단히 부족하고 등록은 미미 하였다.

발명의 사장이 높아 기술수준이 저위에 있음도 안타깝다. 또 발명품 판매의 취약과 한계로 발명가가 성공하지 못하는 여건이었다. 발명품의 시장은 확보하지 못했고 매스컴은 발명품 홍보를 외면하고 있어 발명품 보호를 위한 장치는 일부 관련기관만 인식하고 있는 정도였다. 지금 세계는 정보화시대의 물결과 WTO출범과 지역경제통합으로 세계화 시대를 열고 있는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세계 모든 나라와 당당하게 경쟁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촌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기술력 제고와 특허를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 해야 한다. “발명특허”라는 무기를 가지고 “경제”라는 이름의 전쟁을 치르는 지금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특허권 확보”의 우열에 달려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최근 5년(1988~1992년)간 일본 기업의 경우 특허권 분쟁을 여러가지 형태로 경험했다는<sup>71)</sup> 기업이 전체의 56.2%이며 이 분쟁이 마침내 소송까지 진전되어 고통을 겪은 기업이 전체의 18.4%이며 특허권 침해시 배상액이 과거 매출에 3%였으나 지금은 10~20%까지 많게는 40%까지 올라 있으며 부품의 특허를 가지고 전체 조립품까지 계산하는 종전의 Anti-patent에서 80년대 이후의 Pro-patent로 변화하고 있다.

71) 안광구, 세계는 특허전쟁시대, 특허청, 1995. p. 44.

그런 가운데서 매우 고무적인 것은 우리 국민의 특허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개인보다 법인의 출원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1994년 12월 현재) 총 8만8천여개 기업 가운데 특허는 고사하고 실용신안등록 이라도 한건 이상 보유한 업체가 전체의 2.5%라는 사실과 기업체 부설 연구소가 총 1,980개 있는데 특허는 고사하고 실용신안이라도 1건 등록된 연구소는 전체의 24.7%인 489개 뿐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당혹케 한다.<sup>72)</sup> 또 특허 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803개로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발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의 양적 확대가 선행되어야 겠고 우수발명, 우수특허가 확충되어야 하고 기업체의 연구소 설립과 직무 발명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 철저한 선행특허 기술에 사전 조사와 특허 분쟁시를 대비하여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며 해외출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미국의 2% 수준)<sup>73)</sup>. 특허청은 특허 전산화 System을 구축하여 “특허기술정보 센터”를 설립하여 특허청에 가서 조회하는 일이 없고 온라인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특허출원 후 심사도 신속, 공정하게 해주어야 하므로 특허청의 인력증원이 대대적으로 강행해야 한다. 특허심사 제도도 개혁하여 최근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2년 정도인데 3년이 지나야 권리가 확정되는 전근대적인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또 선진국의 좋은 정책은 과감히 도입하여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독창적인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 외국과의 기술 제휴는 주변기술만 맴돌 수 밖에 없어 기술 연속을 가속화할 뿐 기술독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작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자원은 수입하면 되고 국토는 작아도 활동 무대가

넓으면 되기 때문에 두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야 한다. 여기서는 발명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발명후원자”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축구공을 어시스트 해줌으로 골문안에 골인(Goal-in)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발명후원자는 발명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내야만 한다.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정부도 기업도 변화될 수 없고 기업의 사회지향적 변화의 유효성은 기업과 관련되는 제사회기관의 영향력의 정도와 요구의 타당성에 의존하듯이<sup>74)</sup> 발명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조성해 주어야 한다. 발명환경 조성을 어느 한 기관(특허청)만 해서는 안된다. 매스컴이 앞장서고 국민이 총체적으로 호응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정부도 발명하는 사람에게 크나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발명영웅”을 만들어 무대에 등장시켜야 한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A. Smitn)가 증기기관을 발명할 수 있도록 제임스 와트(J. Watt)를 도와 준 것은 영국의 국부를 가져다 주는 것은 분업도 중요지만 위대한 발명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로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발명특허에 관해서만 연구된 선행 자료가 없고 기술개발이나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자료 뿐이라서 그 중 발명에 관한 부분만을 찾아 배교해 보았으므로 보다 선명한 비교가 될 수 없었다. 또 한국 발명의 문제점은 국가 경제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제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발명만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발명에도 소발명인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발명인 의장도 별도로 분석되어야 하고 상표에 관한 연구도 있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발특 0610**

72) 上揭書 p. 60.

73) 上揭書 p. 69.

74) R. M. Fred Luthans, Social Issues, 3r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0. p. 466.